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보상 착수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중... 일부 보상비 인상·개발면적 확대 요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중앙1지구 분양가 두고 사업자와 협의 난항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원면적을 확보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최대 난관인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다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중앙 1지구 등은 광주시와 아파트 세대수와 용적률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일부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보상 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토지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 평가,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 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마복공원은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토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감정) 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 금액은 표준 공시지가, 주변 시세, 거래 내용, 형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소유주는 보상 금액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 재결신청을 하고 중토위 심의를 받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

중앙(1·2지구)·중외·송암·수랑·마복·일곡·운암산공원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거나 추진 중이다. 봉산공원을 비롯해 중앙 2지구·일곡·운암산공원은 감정 평가도 함

께 추진 중이다. 수랑·중외·신용공원은 비공원 시설(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도 착수했으며, 나머지 공원도 준비 중이다.

일부 사업지는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거나 사업자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유주들이 보상 금액 인상과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행정 소송·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중앙 1지구는 사업자가 비공원 시설 면적·세대수·용적률을 늘리고 후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시가 재검토를 요청해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수익률 감소로 추가 수익구조 확보 없이는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업체측의 공원 조성비용 중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고분양가 관리지

역 지정에 따른 업체손실을 일부 보조해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공원 조성사업이 아닌 아파트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 용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2023년까지 공원 786만8000㎡의 90.3%(710만4000㎡)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000㎡)에는 아파트 1만 2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조9152억원이며 이 가운데 토지 보상은 1조80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가 공원부지로 확보한 90.3%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면적 비율로, 전국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주요도로 2400km

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광주시는 “관내 주요도로 2400km에 대한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개선사업은 위성(GPS)을 활용해 ±30cm 오차범위 안의 정확한 심도, 관경(지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예정노선과 정확도가 낮은 지역부터 하수도 시설물의 정보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842km 구간에 대해 사업을 진행해 전체 구간의 68.8%에 해당되는 1578km를 개선한다.

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매물 시설물을 용역 시작 후 전수 조사하고 자치구에 즉시 통보했으며, 시·구·용역사간 유기적인 협조로 관로 2만6970개, 맨홀 2만1394개, 물받이 4만2136개 등을 조사했다.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 99% 이상 정확도도 확보했다.

정확도 개선사업 중 발견한 지반침하(공동) 의심지역 14곳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에 정비를 요청하고, 도심지 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전여구간 822km에 대한 정확도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전역 하수도 지하시설물의 상세한 위치정보, 속성 데이터가 확보돼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종합대응체계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빛그린 산업단지에 건설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이 공정률 50%를 넘어서는 등 내년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건립 순항

공정률 52.7% ...채용도 순조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완성차 공장이 내년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건립 공정, 직원 채용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서 착공한 공장은 지난 9일 현재 52.7%의 공정률로 전체 공정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정별로 자체 60.5%, 도장 62.9%, 의장 57.2%의 진행률을 보여 이달 말까지는 5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는 설비 공사가 시작돼 설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험생산에 이어 내년 9월에 완성차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산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신규 시장 진출, 시장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처음 출시하는 모델인 경형 SUV로 결정됐다. 공장은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는 혼류 생산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시설 일부만 조정하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도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인력 채용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1차 21명, 2차 39명에 이

어 3차로 경력직 22명을 채용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4개 분야 일반 경력직 과장급 8명, 대리급 14명이다.

대규모 생산직 채용은 생산설비 설치, 시험생산 일정에 맞춰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돼 기초·향상·숙련 등 단계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발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지역민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완성차 공장, 2000여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구광의 최첨단 물류센터 유지 등에 이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15개 시·군 72개 어촌 ‘어촌 뉴딜 300 공모’ 도전

여수·신안 12개, 완도 8개 등 선정 땐 개소당 100억 지원

전남도내 15개 시·군 72개 어촌이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남 어촌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 선정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주민회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신안에서 12개, 완도 8개, 해남 7개, 고흥 6개, 진도 4개 등의 어촌이 해수부 공모에 계획서를 접수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개소당 평균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방파제나 물양장 등 기반시설, 방문객 및 주민 편의시설, 판매장 등 소득시설 등을 설치하고, 역량강화교육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이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그동안 소규모 항포구, 지방어항 등에 대해 제대로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해 어촌들이 이

번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추진된 공모에서 2년 연속 최다(전국 190개소 중 63개소, 33%) 선정돼 사업비 국비 4250억원을 포함해 60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작은 배로 갈아타고 섬으로 진입했던 신안군 만재항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접안시설을 갖춰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어촌·어항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으며, 수산업과 어촌의 중심지로 성장잠재력은 풍부하지만 시설을 갖추지 못해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각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전문가 자문을 수차례 실시하고 역량강화교육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철저한 준비해 왔다. 공모사업 평가는 서면·발표평가(10월), 현장평가(10~11월)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12월말 60개소 내외로 최종 선정·발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20개 기업 공모

15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가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20개 기업을 공모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양질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소재하며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및 근로자 인원 5명(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은 오는 15일까지 소재지 시·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기업 선정은 시·군 및 전남도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원과 ‘2020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를 비롯 인증료부터 2년간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대표 후보 또 부적격...직무 대행 체제

시 “문화 전문가 찾으려 노력”

광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서류심사 합격자 6명을 면접 심사에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1차 공모에서도 4명의 후보자를 심사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현 대표이사 임기는 13일 만료된다. 규정에 따라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시는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가

고 재공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광주에 걸맞은 문화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찾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내정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기 제3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날자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17년 9월 임기를 시작한 김대표이사는 3년 연속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속 A등급, 2019공공기관 성과창출 A+ 등급 획득, 남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등에 기여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